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한 때나마 이 나라 정부에 몰랐던 사람으로 차마 내놓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갈 길을 잃어 이리저리 헤매 때 그렇다. 분명히 표지판을 보고 따라왔는데 중간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분통이 터지는 일을 한두번 겪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한 가운데서 교통체증으로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통체증으로 이 나라 국민이 입고 있는 경제 손실이 연 1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말한다 지가 벌써 오래다.

음식을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연간 십몇조 원이나 되고,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의다운 협의를 해 본 일도 없었고, 그러나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어제 이럴 때뿐이라, 나는 지난 4월의 총선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결과 위선의 공천을 공격해 놓고서도 그 결과는 나도 몰랐으니까라고 시침 똑 따고 말

하는 것이나 철없는 어린이가 전곡국 1번으로 당선되는 것을 보고서 누군들 "이게 나라냐"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나. 단언하거니와 18대 국회는 17대 '탄독이 국회'에 못지않게 저질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국회를 보면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는 한탄을 수도 없이 내뿜게 될 것이다.

그 얼마 전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구성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와 평가거기에 너무나도

치치고 식상했던 뒤끝이라 나라를 온통 뒤지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고 골라 '올스타 코리아'의 진용을 짜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돈 많은 것 빼고는 무능,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그런 정부를 구성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 국영기업체 임원들까지 임기와 관계없이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때 내 편에 서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희망하는 자리를 4개까지 써

내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거나 임명된 경위가 오직 코드에 따른 것이라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나머지는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관례가 되어 5년마다 이 같은 한풀이, 싸늘이 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고도 과연 나라가 온전할까.

얼마 전부터 대통령의 언행 자체가 국

민으로 하여금 "이게 나라냐"고 묻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과 천박한 언어가 국민 된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것이다. 10년에 걸쳐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굳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언동이나, '할 말은 하는 한미관계'를 괜히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우정을 강조해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서둘러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쇠고기협상을 타결한 것도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빼도 박지도 못하게 서투른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옳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미국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디나, 미국을 대변하는지 한국을 대변하는지 모를 연사를 일삼고 있다. 거기다 정부의 미숙과 혼선까지 겹쳐 국민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식품집단소송제 현실성 최우선해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광주의 한 대형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무지구의 음식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거세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광주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상담실, 행정기관 등에는 손해배상소송 절차 등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먹을거리 불안감은 수입 쇠고기만이 아니다.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수입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에 따라 식품안전에 이상이 겹쳤다. 생쥐머리 새우깡, 칼조각 참치캔 등 불량식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식품안전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불매운동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때마침 정부도 광우병 '파동'이 커져자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위대한 식품의 섭취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

식품집단소송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배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국민건강권 확보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농철 '비료대란' 농민 피해 걱정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 '비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화학비료 생산업체들이 최근 가격 인상과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협에 비료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은 벌써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료 생산업체들이 납품중단 원인은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에 따른 경영난이다. 비료 원자재가 상승세는 가파르다. 원자재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암모니아 56%, 인광석 200%, 염화칼리 81% 등이라고 한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가 급등의 불똥이 비료에도 번진 것이다.

농협은 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 2005년 완전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의 부활에 부정적이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자가 2천679억원이나 남아 있는데다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늘려나가겠다는 정

책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문제는 공급 중단의 장기화다. 생산업체와 농협 및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5~6월은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의 70%가 집중되는 시기다. 수요 집중기에 장기간 공급이 중단되면 '비료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모내기가 본격화되는 다음달이 걱정이다. 농협은 제고와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생산량으로 5월까지의 결핍을 감당할 수 있지만 6월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영농철에 비료를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료 생산업체와 농협, 정부는 협상에 나서 '비료대란'만은 막아야 한다. 면세유에 이어 비료값까지 인상되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업체들은 비료부터 공급하기 바란다. 경영난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과 농업에 담보로 가격 인상을 고집해선 비란은 피할 수 없다.

無等鼓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그메 싱그에 왕추크, 그는 비록 전체 인구 80만도 채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의 통치자였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한 가지 의미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불과 16세이던 지난 1971년 왕위에 즉위했는데 이듬해인 1972년 세계 최초로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이란 생활 개념을 도입했다. 당시 경제학에는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용어만 있었다. 세계 각국이 국부 창출을 위해 오직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성장에만 매달릴 때였다. 하지만 그는 국정운영

의 중심에 국민의 '행복'을 올려놓았다. 당시 학계는 물론 어느 국가도 부탄의 실험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각국이 경제성장만이 능사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30년이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학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GDP가 아닌 계량화된 행복지수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걸 고민해야 한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국민총행복



최고 값이 비싼 요즘, 쇠고기를 못먹어 한숨 짓는 국민은 없다. 흰 쌀밥이 고깃국 배를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60~70년대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 외적인 질적성장, 나라의 사회제도와 구조,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과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NGO 칼럼

김범웅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뚝에는 반짝이는 금포대 빛, 뒤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오래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심을 키웠던 어른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지켜주기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몰아 버렸다. 강과 하천을 훼손한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2008 한국 강의 날' 대회가 오는 8월21일부터 23일까지 나주 동진대와 영산강 일원에서 펼쳐진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란 주제 아

며, 우리가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할 유산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소수 정치인, 이해관계자, 관변학자들의 주장처럼 미래 경제발전의 초석이란 명목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반도 운하는 반도 탄생 이래 발생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며 전국민적 이해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도보삼십은 운하건설은 생명의 흐름을 단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내 생명은 국가, 사회, 경제, 문화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내 생

'한국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하며

래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강과 하천 보전 사례를 갖고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이를 통해 좋은 관계 대한 공동의 상을 만들고 바람직한 강과 하천 운동의 모범을 찾아나가는 자리다. 강과 하천은 미래로 흐르는 희망이다. 흐르는 물은 모든 생명을 깨우고, 산을 타고 흐른 물은 마을 앞 도랑을 지나 대지의 모든 풀과 나무를 적신다. 생명의 삶을 키우고 농민의 목마름을 가시게 하고, 맑고 푸근한 색깔을 신기하게 하는 어린이의 꿈을 키운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시인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 강은 생명이다. 이 땅 대자연의 숨결은 유유히 흐르며 생명에 나누고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에서 솟아나는 생명과 평화와 기운은 우리가 지켜 가야 할 영원한 성소이

며, 우리가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할 유산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소수 정치인, 이해관계자, 관변학자들의 주장처럼 미래 경제발전의 초석이란 명목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반도 운하는 반도 탄생 이래 발생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며 전국민적 이해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도보삼십은 운하건설은 생명의 흐름을 단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내 생명은 국가, 사회, 경제, 문화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내 생

〈한국 강의 날 대회 나주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학생 아르바이트 부담처우 심각... 대학이 직접 나서야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들은 너나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취업자들의 노동 착취는 여전하다. 학생들이 고용에 있어서 약자인데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은 시급 3천770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아르바이트도 적절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기준을 무시한 채 급여를 적게 준다. 학생들은 대부분 주유소

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학생 고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청소년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도 없다. 이 같은 학생들의 고용 착취를 막기 위해 대학의 학생처나 취업보도처 등 학생 후생복지 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계약 방법·최저임금제 등 노동관계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쳤으면 한다. 특히 대학 내에 학생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해결 기구를 뒤 대학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를 적절히 해결했으면 한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살각! 동물세상. 썩 먹는 곰. 에조볼곰 '어리와 버리'가 오늘도 여전히 장난질을 하고 있다. 애들은 무얼 주어도 그걸 가지고 잘 놀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취재 오면 누구보다도 앞세우는 출연 1순위 동물이다. 동물원 여름나기를 촬영할 때는 열을 맺지 않고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과 내 생명의 관계는 그물코처럼 연계돼 있다. 고로 강이 나고 내가 곧 강이다. 강과 산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잘못된 위험한 일이다. 이 물이 나 아님을 자각하고 물과 흙, 이웃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내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웃과 함께 자연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삶이다. 한번은 썩의 효능을 알아보는 프로에서 곰에게 썩을 한번 먹여보자고 해서 이들에게 가져다주었다니 넉넉넉하게 잘 받아먹었다. 아마도 다른 곰 같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서 함침을 들여다보고 냄새 맡고 고심부터 했겠지만 이 순진한 녀석들은 자기와 친한 사육사나 수의사가 주는 건 웬만하면 의심치 않고 그냥 먹고 보는 것이다.

수산물 저울 조작 눈속임 판매 사라져야

알마전 대계 두 마리를 샀다. 가게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니 2kg이었다. 2kg의 값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얼마 컸냐"며 물었다. "2kg짜리 0만원"이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2kg이나"며 핀잔을 줬다. 혹시나 집에 있던 재봉기용계량 저울로 달아봤더니 700g이 모자랐다. 밤 늦게 따져볼 걸 수도 없어서 그냥 참았지만 기분 나빴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대개나 광어나 우럭 등 수산물을 구입할 때 그 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수산물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에는 결국 저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울을 조작해 눈속임한다니 어찌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저울 조작이 아니더라도 정량을 잘 때 쓰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 양을 속이는 수법을 적잖게 볼 수 있다. 바구니를 겹쳐 놓거나, 테이프로 박스를 둘둘 말아 무게를 짊으로써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따지며 "그 무게 맞냐, 저울 속인 거 아니냐?"고 따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소비자들이 상인들의 양심을 믿는 것처럼 수산물시장의 상인들도 이전 과거의 눈속임 관행을 벗고 정직하게 판매해줄기를 바란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9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